

月 1천만명 머무는 ‘활력 전남’…지방소멸 위기 극복

전남도, 인구대전환 시준2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 가동

체류형 콘텐츠 등 3대 전략 마련

연결-유입-성장 100개 과제 추진

年 15조원 지역 소비 효과 기대

전남도가 지방소멸 위기를 극복하고 지역에 지속 가능한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월 1천만명이 머무는 활력 전남’을 비전으로 인구대전환 시준2인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를 본격 추진한다. 생활인구 통계는 등록인구(주민등록·외국인)와 체류인구(월 1회 3시간 이상 머문 사람)를 더한 수치로 2023년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시행으로 정책에 도입됐다. 2026년부터 지방교부세 산정에 반영될 예정이다.

2025년 3월 생활인구 통계 기준 전남 인구감소지역 16개 군의 등록인구는 70만명, 체류 인구는 278만명으로 생활인구는 348만명에 달한다. 한 달간 등록 인구의 5배가 전남을 오가며 생활하는 셈이다.

이에 따라 전남도는 지난 5월부터 24개 실·군이 참여하는 TF를 구성, 생활인구 유입 활성화 과제를 발굴하고 전남연구원 인구전략추진센터와 함께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로 연결-유입-성장 3대 전략, 20개 핵심과제, 100대 과제를 선정했다.

‘연결’ 전략은 전 국민이 전남을 ‘두 번째 고향처럼 느끼도록’ 관계 인구를 넓히는 데 중점을 둔다.

‘전남 사랑에(愛) 서포터즈 100만명 육성’을 목표로 추진하고 관광·특산품·귀농귀촌 정책 등을 지속적으로 알려 정주 인구로 유치할 계획이다.

영상 콘텐츠를 활용한 ‘살고 싶은 전남’ 브랜드 홍보를 대대적으로 펼쳐 전남에 대한 흥미와 친근감을 높일 방침이다.

이와 함께 귀농산여촌 종합센터(서울) 운영, 전남 관광플랫폼(JN TOUR) 운영, 출항 향우 ‘고향에(愛) 가지’, 청소년 메가 페스티벌 등 생활인구 유입의 출발점이 되는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유입’ 전략은 전남에 ‘머무를 이유’를 만드는 것이다. 일·습·체험이 공존하는 체류형 생활공간과 콘텐츠를 확충할 계획이다.

‘권역별 상생 체류형 관광상품 개발’은 축제·숙박·체험 등 시·군 간 보유 관광 콘텐츠를 연계해 체류형 모델로 구축한다.

‘전남 위케이션 생활인구 정착 프로그램’은 시·군별 거점을 조성해 장·단기 근무형을 운영하고 숙박·체험 인센티브를 제공해 기업 참여를 확대한다.

장성 축령산을 명품 숲 거점으로 산림휴양·조

림역사관·기념정원 등을 조성해 ‘100대 명품 숲 연계 콘텐츠’를 개발, 웰니스 관광모델로 발전시킨다는 구상이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운영, 마음건강치유센터 확대 운영, 섬바다 연안크루즈 운영 등 지역 경제를 움직이는 인구활력 체류형 모델 구축을 위해 50개 과제를 추진한다.

‘성장’ 전략의 경우 머무는 인구가 전남과 지속적으로 관계를 맺고 정착하도록 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전남형 빈집재생 프로젝트’를 통해 농어촌 유휴주택 100호를 리모델링해 체류형 공간으로 재 활용(70억원)하고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으로 지역경제 순환을 촉진한다.

‘농촌 체류형 복합단지 조성’으로 귀농·귀촌 희망자에게 주거공간과 창업·취업 연계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1개 시·군 시범사업(공모)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전남형 새뜰하우스 운영, 솔라시도 기업도시 외국교육기관 설립, 외국인 원스톱 종합상담 서비스 운영, 외국인 안심병원 운영 등 20개 과제를 추진한다.

3개 전략과 함께 생활인구 체류와 정착을 뒷받침하기 위해 빈집특화형 도시재생, 관광농원 규제 완화, 연안여객선 공영제 도입 등 10개 과제의 제도 개선 노력도 함께 추진한다.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 추진으로 월 1천만 명이 전남에 머무르면 2025년 1분기 전남 생활인구 1인당 평균 소비액(12만3천원)을 기준으로 연간 약 15조원 규모의 지역 소비 효과가 기대된다.

김영록 전남지사는 “생활인구는 단순한 방문객이 아니라 전남의 일상을 함께 만드는 또 하나의 ‘도민’이라며 “생활인구 생생생 프로젝트를 통해 사람이 전남으로 모이고 전남이 대한민국 인구정착을 선도하는 새로운 기준점이 되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재정 기자

광주 전통시장 수산물 최대 30% 환급

23일까지 양동·봉선·운암시장 등 6곳

광주시 전통시장 수산물 환급행사가 19~22일 6개 전통시장에서 열린다.

해양수산부가 주관하고 광주시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참여하는 ‘11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는 국산 수산물 소비와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한 소비자 참여형 행사다.

참여 시장은 ▲남광주·남광주해뜨는시장연합 ▲양동전통시장연합 ▲봉선시장 ▲운암시장 ▲월곡시장연합 ▲서부농수산물도매시장 등 6

곳이다. 행사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다.

행사 기간 전통시장에서 국산 수산물을 구매한 소비자는 당일 구매 영수증을 환급 부스에 제출하면 현장에서 본인 확인 후 구매 금액의 30%를 온누리 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1인 최대 2만원 한도로 제공한다.

전영복 경제정책과장은 “전통시장의 국산 수산물 소비를 활성화하고 전통시장에 활력을 불어넣는 행사”라며 “높은 장바구니 물가 부담을 덜고 시민들이 전통시장을 더 많이 찾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이언주 민주당 최고위원, 북구서 간담회

18일 광주 북구청을 방문한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최고위원과 청년간부위원 등이 소회의실에서 관계 공무원들과 지역 전략산업 발전 방안과 지역 정책 환경 조성을 위한 간담회를 갖고 있다.

<광주북구 제공>

道, 청년문화복지카드 취약계층 지원 확대

문화누리카드 수혜자도 25만원 전액 지급

전남도는 18일 “2026년부터 전남 청년 문화복지카드 사업 추진 시 경제적 취약 계층(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이 수혜를 받는 문화누리카드 지급자에게도 25만원 전액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는 청년의 문화 향유 기회를 넓히고 자기 계발을 돕기 위해 2022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전국 최초로 소득 기준 없이 청년에게 문화복지비를 10년간 최대 250만원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청년은 공연 관람, 학원 수강, 도서 구입, 체육시설 이용 등 다양한 문화·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기존 전남청년 문화복지카드는 전남에서 2년 이상 주소를 두고 거주한 19세 이상 28세 이하 청년에게 1인당 연 25만원을 지원했지만 문화누리카드 수혜를 받는 신청자에 한해서는 문화누리카드 수혜액을 차감한 금액만 지급했다.

전남도는 취약계층 청년의 실질 지원액이 줄어드는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건복지부 사회보장협의회의 개선 건의를 통해 복지 불균형을 해소하고 청년의 문화향유권을 보장하기 위해 제도 개선을 추진했다. 이후 1년여 노력 끝에 결실을 봐 2026년부터 문화누리카드 대상자에게 지원금액 25만원을 전액 지급할 방침이다.

/김재정 기자

28일 김치타운서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

내달 14일까지…시민참여·기부 가능

광주시는 오는 28일부터 12월14일까지 광주 김치타운에서 ‘2025년 빛고을 사랑나눔 김장대전’을 연다.

광주시는 시민들이 김장철을 앞두고 손쉽게 김장을 준비하고 기업·단체의 기부문화 확산을 위해 2014년부터 김장대전을 운영하고 있다. 올해 김장대전 재료는 광주·전남지역에서

생산된 배추, 고춧가루, 멸치액젓, 소금 등을 공동 구매해 제공되며 세계김치연구소와 대통령상 수상자가 공동 개발한 레시피로 김치를 담근다.

김장 가격(10kg 기준)은 현장 버무리기 6만6천원, 현장 수령(완제품) 6만8천원, 택배(완제품) 7만원이다.

전통식품품질인증과 해썬(HACCP) 인증을 받은 지역 김치 제조업체가 참여해 시중보다 저

렴하게 공급·판매한다.

참여를 원하는 시민은 김장대전 공식 누리집에서 사전 신청해야 한다. 김치 기부 행사를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김장대전 사무국(062-676-3601)으로 문의하면 된다.

광주시는 김장철 외에도 시민들이 연중 김치를 담글 수 있도록 4월부터 11월까지 매월 둘째·넷째주 토요일과 일요일에 김치 담그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변은진 기자

광주 안의 유일한

천환경 수목장

☑아름다운 자연

☑365일 관리

☑가족구성 가능

☑사용기한 없음

☑전문 이장

☑광주시청 20분

수목장 · 묘지 이장 · 장례

상담: 062-449-4446

CMYK